

부시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

□ 미국의 대내외 경제적 상황

- 최근 미국 주요 경제지표가 약세를 나타내고 경기 경착륙 가능성이 대두되어, 부시 집권 후 1~2년 간은 성장률 둔화와 무역수지 적자 확대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대부분의 기관들이 1~2%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부 투자은행들은 상반기 중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나, 연준의 공격적 금리인하와 대규모 감세로 경기가 본격적인 침체국면으로 돌입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 부시의 경제 정책 방향

- (재정 및 조세 정책) 2001년부터 10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4.6조 달러 규모의 재정흑자를 감안하여 2010년까지 총 1조 3,000억 달러의 조세감면을 계획중임
- 당초 민주당의 반발에 따라 대규모 조세감면 정책은 원안대로의 시행 가능성이 불투명했으나, 경기 경착륙 가능성이 점차 짙어지면서 조세감면에 상당히 무게가 실리고 있음
- (외환정책) 부시의 경제정책 자문을 담당해온 로렌스 린지 등은 이전부터 高달러 기조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고 유로화나 엔화 가치 부양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도 기피해 왔음
- (통상정책) 부시 행정부는 집권 초기, 단기간에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수입 규제와 쌍무협상을 상대적으로 선호할 것으로 보임
- 미국과 EU는 각종 통상 문제로 마찰을 겪으면서도, 일부 품목, 특히 철강, 조선 등에 대한 규제에 대해 공동 보조를 취할 의사를 밝히고 있음
- 상대국 기업들의 대규모 합병과 공동행위에 대한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이나, '신속처리권'의 도입을 통한 쌍무적 통상압력의 강화 등이 전망됨

부시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

정반석 연구위원 bsjoung@hri.co.kr ☎ 3669-4014

양성수 주임연구위원 yangs@hri.co.kr ☎ 3669-4030

미국의 대내외 경제적 상황

- 최근 미국 주요 경제지표가 약세를 나타내고 증시도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경기 경착륙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임
 - 가계소비지출, 내구재 주문액, NAPM 지수, 소매판매지수, 소비자신뢰지수 등 각종 지표가 모두 급격한 약세를 보이고 있음
 - 주가 하락, 고용 감소 예상, 가계부채 급증 등으로 앞으로 민간소비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업 수익성 악화에 따라 IT 관련 기업 등의 설비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보임
 - 대부분의 기관들이 종전 전망치(2.5~3.3%)보다 크게 낮은 1~2%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 삭스 등 일부 투자은행들은 상반기 중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고 있음
 - 이같은 상황 속에서 지난 1월 3일 연준은 연방기금금리를 6.0%로 50bp 인하하였음. 연준은 1월 말 FOMC 정례회의에서 추가로 50bp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며, 6월 이전에 금리수준을 5%수준으로 하락시킬 전망이다
 - 부시행정부도 성장세 둔화에 대응하여 감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여 경기가 전반적으로 하향세에 있으나 침체국면으로 돌입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 80년대의 쌍둥이 적자 중 재정적자는 향후 10년 간 4조 달러 이상의 흑자가 예상되는 등 완전히 해소되었으나, 무역수지 적자 폭은 여전히 큼
 - 2000년 들어서도 무역수지 적자는 매월 신기록을 수립했으며, 연간 약 4,00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001년 이후에도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부시 집권 후 1~2년 간은 성장률 둔화와 무역수지 적자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통상정책이 강화할 것으로 보임

부시의 경제 정책 방향

○ 재정 및 조세 정책

- 2001년부터 10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4.6조 달러 규모의 재정흑자를 감안하여 대규모 조세감면을 계획중임
 - 이중 절반을 사회보장기금으로 유보시키고 30%는 조세감면에 나머지 20%는 교육 및 의료보험 개혁 등에 사용한다는 것임
- 2010년까지 총 1조 3,000억 달러의 감세를 위해¹⁾ 소득세 세율단계 축소 및 세율 인하와 더불어 상속세 폐지가 단행될 예정임
 - 당초 민주당의 반발에 따라 대규모 조세감면 정책은 원안대로의 시행 가능성이 불투명했으나 경기 경착륙 가능성이 점차 짙어지면서 조세감면에 상당한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임
 - 민주당 상하 양원 의원들도 조세감면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어 대규모 감면도 가능할 전망이다

○ 외환 정책

- 클린턴 행정부의 고달러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임
 - 부시의 경제정책 자문을 담당해온 로렌스 린지 등은 이전부터 高달러 기조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고 유로화나 엔화 가치 부양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도 기피해 왔음
 - 2000년 9월의 유로화 부양을 위한 연준의 공조 개입 결정에 대해서도 부시측 인사들은 이를 그린스펀 의장의 실책이라 지적한 바 있음
 - 폴 오닐 재무장관 지명자 역시 상원의 인준 청문회에서 고달러 유지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천명하였음
 - 따라서 對日무역역조 등의 해소를 위해서 시장개입을 통한 환율 조정보다는 일본의 구조개혁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통상압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임

1) 1조 3,000억 달러 감세시 향후 10년간 연평균 GDP 증가율은 0.09%p 상승하고 실업률은 0.5%p 낮아질 것으로 추정됨

○ 통상정책

- 부시 행정부는 집권 초기, 단기간에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수입 규제와 쌍무협상을 상대적으로 선호할 것으로 보임
 - 99년 말 시애틀 각료회의와 그 이후에 추진된 각종 개별 의제(노동, 환경, 경쟁정책 등)에 대한 다자간 협상은 아직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함
 - 다만, 뉴라운드 의제들, 특히 환경과 노동 문제를 쌍무협상 과정에서 압력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매우 높음
 - 클린턴 행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무역과 노동·환경·인권기준과의 직접적인 연계에는 반대할 것임

부시 집권 이후 초기의 통상 환경		
구 분	강화 가능성	비 고
수입 규제	●●●	- 집권 후 1~2년간 경제 상황의 급격한 악화로 집중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
자국법 역외적용 (특히 독점금지법)	●●	- 미국과 EU간 법 적용 강화 속에서 한국 기업 규제 우려 - 특히 통신 기기에 대해서 자국법 적용을 강조
쌍무 협상	●●	- 단기적 성과 달성을 위해 집권 초반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다자간 협상	●	- 새로운 다자간 협상 의제를 무역과 연계시키되 뚜렷한 성과가 없을 시에는 쌍무적인 통상 압력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특히 노동문제와 환경)

- (수입 규제) 수입 규제는 자국 시장을 보호한다는 목적과 더불어 상대국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성격도 내포하고 있음
 - 미국과 EU는 각종 통상 문제로 마찰을 겪으면서도, 일부 품목, 특히 철강, 조선 등에 대한 규제에 대해 공동 보조를 취할 의사를 밝히고 있음
 - 텍사스 주지사 출신인 부시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에 특히 수입 규제를 강화할 수 있으며, 타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목표로 국가별로 보호무역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음
- (독점금지법 역외 적용 강화) 독점금지법의 역외 적용을 통한 외국 기업 규제도 단기적으로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수단임

- 이는 해당 산업이 아니라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는 성격이 강함
- 상대국 기업들의 대규모 합병과 공동행위가 자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들어 독점금지법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잦을 것으로 예상됨
- 이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음. 최근 국내 해운회사들의 운임 할인 거부와 제약 회사들의 가격 담합에 대해 EU에서 독점금지법을 적용한 것과, 국내 반도체 기업의 합병에 대해 미국에서 제재를 검토한 것들이 그 예임

<독점금지법 역외 적용에 대한 대응>

- 미국의 사법적 절차 등에 관한 지식 축적

- 국내 공정거래법의 적용과 해석이 상당 부분 행정부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미국은 사법부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미국법을 해석하고 재판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 미국의 독점금지법 재판은 정부에 의한 제소보다도 기업에 의한 제소가 많아서 한가지 사안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재판에 연루될 수도 있음

- 산업에 대한 지식 축적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

- 미국의 독점금지법 적용과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행위의 합리성이며, 이는 경제학적 논리에 근거한 산업 분석을 통해 이루어짐
-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응하는 것보다는 저명한 산업분석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놓는 것이 중요함

- (쌍무 협상의 강화) 부시 대통령은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해 클린턴 행정부에서 입안시키지 못한 '신속처리권'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음

- 특히 힘에 입각한 일방주의와 고립주의를 선호하는 공화당의 성향에 따라 쌍무협상의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임
- 이미 부시는 정강정책에서 한국 자동차시장의 폐쇄성을 지적하며 시장개방압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임
- 또한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무역장벽 철폐를 주장하는 등 농산물 시장 개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농업분야에 대한 통상압력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
- 반덤핑관세제도 등 불공정무역제제조치를 최대한 활용하거나 외국산 철강재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 조치(safeguards actions)를 발동할 가능성도 있음 **HRI**